

차기정부가 지켜야 할 주요 농정공약과 한농연의 활동방향

- 한농연 정책조정실 -

차기정부가 지켜야 할 주요 농정공약

-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연장한다.
- 농림부문 예산이 국가전체 예산에서 10%가 넘도록 한다.
-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장기 분할 상환', '금리는 1.5%'로 한다.
- 상호금융자금·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연대보증특별자금을 장기분할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 직불제를 농업소득의 20%수준까지 보전한다.
-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규모를 5ha까지 확대한다.
- 방역청을 신설한다.
-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시키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
-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
-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겠다.
-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차기정부가 지켜야 할 주요 농정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차기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차기정부의 농정 방향을 짚어보고, 차기정부가 지켜야 할 농정공약과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올해 ‘농정공약 이행 감시단’이 진행할 사업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위와 같은 주요 농정공약을 제시하였다. 인수위의 활동에서도 농가부채 문제나 농특세 문제 등 이와 관련한 농정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고 다른 부처와 협력해야 할 공약이 많다. 현재와 같은 정부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다.

한 예로 지난 1월 7일 발표한 10대 국정과제에

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농업이 빠져 있었다. 모든 산업을 과제로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었는지 일주일이 지나 '개방화시대의 농어민 대책'이 특별과제로 선정되었다.

농정공약을 차기 정부가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따져 임기 내에 지켜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기정부가 공약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야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공약이 될 것임을 지적한다.

우선 새 정부는 농정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농정이 세계경제에 농업을 일방적으로 개방시키고, 일관성 없이 임기응변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현재 농업정책은 수입개방 따위의 외부적 여건만을 따져 농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이 지닌 고유의 가치는 무시한 채 시장지향과 경쟁력 강화가 농정의 목표가 되어 버렸다.

농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우선 농업이 2·3차 산업의 기초이며 국민에게 늘 안전한 식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농축산물이 넘쳐 나는데도 보조금을 끊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농정의 목표는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농업에서 쌀 농사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비한 식량자급을 목표로 해

야 한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농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품목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소득을 뒷받침해줘야 이러한 농정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차기정부는 '농정공약 이행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시키는 것을 주요 농정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제정되고 부서가 이관한 것은 3년이 지나 버린 2001년 초였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 한농연을 중심으로 농민단체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신뢰받는 농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정공약을 지킬 '시기, 방법, 주체, 예산'을 분명하게 작성해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차기정부는 권력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농정현안을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모든 권한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2월 25일 취임식 이후가 된다. 그런 점을 틈타 현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공식 서명을 준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차기정부의 의지까지도 의심할 만한 일이다.

또, 올 3월로 예정된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관세화 감축 방식에 따라서 농업이 급격하게 축소되느냐, 기간을 연장시키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좀더 체계적인 협상전략으로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는 농가소득보장과 농업기반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농정의 하달이 아니라 참여와 신뢰의 농정을 정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400만 농민이 바라는 농정개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농정자문 기구를 설치해 농민단체와 직접적으로 대통령, 관료, 학계 등이 참가하고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농연 농정공약 이행 감시기구가 해야 할 것

앞에서 차기정부가 지켜야 할 주요 농정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것도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농정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일회성 구호에 그치거나 단순한 이슈제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선거에서 밝힌 공약이 흐지부지 실천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농정공약 이행 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대선 공약 관철 운동을 중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집중 활동할 것이다. 또한, 2004년 17대 총선과 연계하여 지키지 못했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농정공약 이행 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전체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주요한 활동을 선정하였다.

1단계는 올해 8월까지이다. 그 기간동안 감시

단은 민주당이 밝힌 농정공약 70여 개를 우선 순위로 분류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농정공약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각각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농정공약을 지키겠다 하더라도 보완해야 하는 것은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가 말뿐인 농정공약이 되지 않게 이른바 '농정공약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03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이다. 2단계에서는 차기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기정부의 농업 보호 의지를 살펴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다. 감시단은 '차기정부 농정공약 이행여부 중간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여부 및 향후 과제를 밝힐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대응활동과 연계해 차기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3단계는 2004년 상반기까지이다. 17대 총선과 연계해 미이행 공약에 대한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농정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17대 총선을 이용해 최대한 농정공약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한다. 또한,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올해는 향후 농업의 장래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농연의 역량을 집중하여 차기정부가 농정공약을 꼭 지키도록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한농연**